

민선 5기 지방재정 진단

지방 재정은 아직도 2할 자치
차등보조율제 도입 시급하다

강운태 민주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

-광주·전남을 비롯한 상당수 자치단체가 재정난 심화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3할 자치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원을 보면 조세 총액인 240조원 중 79%가 국세, 21%가 지방세여서 '2할 자치'라고 할 만하다.
또 사무의 경우 4만3000여개의 사무 중 국가사무가 71%, 자치사무가 29%로 '3할 자치'에 불과하다.
특히, 재정의 경우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지자체의 자체 수입 증가는 미미한 반면 국고보조는 매칭에 따

-지방자치 문제는 지역 불균형과도 맞물려 있다.
▲지방자치 확대노력과 함께, 심화하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전국도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경제적 부의 70%가 몰려 있는 '수도권 공화국'이다. 이례서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해방 직후인 1949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구 변화를 보면 수도권 인구는 498.9%가 증가했지만 호남권은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역간 인구이동은 일차리를 찾아서 기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기업체 입지와 이전



첨예대립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방채 발행 국비로 충당해야

박준영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정부가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도 등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지자체들은 지난해에 이미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충당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가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안을 들고 나오면서 비롯됐다.
무상보육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5대 5의 비율로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20%에 불과하다. 재정분야부터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 단 지방발전의 격차를 감안해 재정을 분배해야 한다.
교육자치도 절실한 분야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
전남은 농어촌 벽지학교가 많다보니 일괄적으로 통폐합을 시도할 경우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고교생이라면 기숙사 합숙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린 초등학생은 부모 곁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 그런데 학교 통폐합으로 갑자기 다니던 학교가 사라져 수 km 거리를

민주 단체장 104명과 함께 5할 자치 추진

른 부담과 사회복지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 방안이 있다면.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국세를 적극적으로 지방세로 전환, 지방 세원을 늘려야 한다. 특히 1800여개 사업별로 지나치게 칸막이 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 지원방식을 바꿔 '분야별 배분하는' 포괄보조금제도로 개선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규모가 작고 경제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국고를 많이 지원해주는 차등보조율제 도입이 필요하다. 재원 배분의 중요한 기준인 인구도 현재 인구뿐만 아니라 1949년 정부가 최초로 발표했던 인구까지 고려해야 한다.
사무의 경우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한과 책임 하에 주민복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5할 자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은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후, 애초 2할 자치수준에서 사무는 5할 자치, 재원은 4할 자치 수준으로 발전했다.)

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수도권으로부터 먼 곳으로 이전할수록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도와 강원도 쪽으로 이전하고 있고, 최근엔 '충청권의 범수도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남부권(영·호남)이 대등하게 1대 1 구조로 발전하는 '남부권 경제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영남과 호남이 긴밀히 연대 협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수도권으로부터 먼 곳에 기업이 입지 할수록 과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은.
▲지난 9일 창립된 '민주통합당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104명이 참여한 단체다. 앞으로 이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연대, 지방자치를 5할 자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비용이 급증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이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80%는 중앙정부가 쓰고 나머지 20%만 지방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이른바 '2할 자치'가 원인으로, 이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5기 후반기를 앞두고 박준영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강운태 민주통합당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재정 등 자치시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농어촌학교 통폐합 지역 실정 맞게 조정을
가 갑자기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 나오니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는 지방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이번엔 전국 16개 광역 시·도가 추경에 지방비 부담분을 편성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문제의 책임은 1차로 국회에 있고 2차로 정부에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나
▲16개 시·도가 새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만 7000억원 이상이다. 추가 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7,8월부터는 지방비 부족으로 무상보육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도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일한 방법은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정부가 내년엔 국비로 충당해 주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정부에 할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분권 문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떠나 8년간 전남도정을 이끌어 온 3선 광역단체장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지방자치시대지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분야가 너무 많다. 그 중에서 최우선으로 풀고 싶은 것은 역시 재정 분야다.
세금은 전 국민이 내는데 80%를 중앙정부가 쓰고 지방정부가 집행할 수 비율은

Advertisement for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Treat insomnia with Korean medic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wl of food and text describing the symptoms and treatment. The ad is for '경희한의원' (Gyeonghee Hanuiwon)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